

2022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월 특별호>

(주제: 디지털시대의 청렴윤리경영)

COVER STORY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IT 및 AI 등의 첨단기술이 사용되며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업 역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데 앞서 정립해야 할 올바른 청렴윤리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칼럼

디지털 전환기의 정부-기업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일상속 변화 중 하나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의 확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먼 미래에 진행되는 일이 아닌 바로 지금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IT 강국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지난 2020년 발표된 'OECD 디지털 경제전망(DEO)'에서는 broadband 인프라 1위, 디지털 정부 플랫폼경쟁력 2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디지털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5G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의결하고 1조 달러('22.1월 기준, 1,197조원)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였으며, EU는 AI 산업에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22.1월 기준, 27.6조) 이상 투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경제 및 사회적 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며, 2025년까지 총 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로 구성되며, 디지털 뉴딜에 49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14만개의 공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 등 '데이터 댐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 등 핵심 기반 기술 육성, 108개 지자체에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보급하여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지난 1월 5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민원을 단순 처리만 하는 '행정시대'를 종식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증진하는 디지털 정책시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국민

권익위는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 및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권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1,074개에 이르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연간 천 삼백 만 건의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과 소통해왔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개통하였으며, 현재까지 백 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상향식으로 정책을 제안하여 각 부처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수천만 건의 민원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전통키보드, 점자블록, 친환경차 등 국민이 힘들어하는 현안 문제를 조기 발굴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으로 한층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민원 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자동 안내하고,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를 접목하여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300만건의 국민제안과 민원 빅데이터를 다른 공공·민간 데이터와 연계·활용하여 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업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대한상의 지속 성장이슈서티브(SGI)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데이터의 전 산업 확장,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고부가 가치 신산업 진출,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이 특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도 사업분야를 불문하고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 효율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고객별 맞춤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의 디지털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부패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리스크 평가 결과를 내부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리스크가 높은 상황을 절차적으로 차단하거나 위험신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을 통해 부패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부패 시나리오를 도출한다면 부패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권익위를 비롯한 정부, 기업 등 사회 각 영역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각계의 노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 구축, 청렴윤리경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례들보기

디지털시대 비용효율적인 청렴윤리경영

과거 (금융)기업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로 예방적 방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준법감시 시스템 등 레그테크(RegTech)¹⁾ 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글로벌 선진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체계와 더불어 강력한 내부통제 기반을 구축해 예방적 대처방법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례들보기에서는 청렴윤리경영으로의 첨단기술의 도입이 기업과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RBS(Royal Bank of Scotland),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레그테크 애플리케이션

RBS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모기지론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레그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산원장 플랫폼인 코르다(Corda)에 구축된 신청서가 주택담보대출 거래가 실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생성된 영수증은 분산원장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금융행위규제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같은 규제기관이 감독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3개월마다 FCA에 주택담보대출 활동 기록을 수동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규제당국 모두에게 효율적인 대안으로 작용했다.

2. 우리은행, 레그테크를 통한 선적서류 심사 자동화

레그테크를 활용한 'AI Sanction 심사 자동화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수출입 선적서류를 자동으로 심사하는 AI 기반 제재법규 심사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기술과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선적서류 이미지의 문자를 탐지한 후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여 텍스트 분석기술로 추출된 문자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식별해 의미와 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자동화 병행검사, 심사항목 자동 추출, 필터링, 통계적 분석을 통한 위험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출된 심사대상 항목에 대해 제재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자체점검 대상거래를 자동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위험평가에 기반한 심사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고, 심사 종료 후 거래동향과 패턴 등 통계적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기간별 추이와 고객관리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심사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효율성과 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다.

1)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를 의미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데이터, 컴퓨터 네트워크,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신한은행, 레그테크를 통한 '정보보호' 규제 준수

레그테크를 활용한 '정보보호 레그테크 시스템'은 기존 정보보호의 업무 특성상 보안담당자에게 집중되는 위험 부담과 피로를 줄여주어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즉 특정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시켜 정보감사, 관리,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글로벌 모니터링, 정보보호 탐지 등 국내외 정보보호규제 준수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2018년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의 시행으로 EU와의 (정보)거래가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자사의 국외 점포 또는 지사 등의 정보보호 규제항목 이행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나 평가지표, 보안 관련 업무 수행(안티바이러스 등 보안 솔루션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정보의 빅데이터 및 보안점검 모니터링으로 취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일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관련성을 향상시킨다.

정보보안 상 컴플라이언스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목표는 기업이 건전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법령, 규정 등에 부합하는 통제장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 없는 무조건적인 종속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부합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의 적용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에 부합하는 통제장치에 종속되면서도 비용효율적으로 혁신경쟁을 가속화하게 할 것이다.

보고서리뷰

디지털시대 준법의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김성용(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

지난해 12월 22일 환자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과거 발생했던 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이번 사건이 특별히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또 다시 포털사, 카드사, 보험사 등에 이어 개인의료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디지털시대 첨단기술이 기업이 정보의 생성, 보관, 삭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법의 자동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보고서리뷰에서는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로 인해 지켜야 할 많은 규칙, 해결해야 할 많은 위험과 보안상 문제점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시대 기업들이 투명하고 안전한 청렴윤리경영의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1. 디지털시대 청렴윤리경영의 첫 단추 IT컴플라이언스

거의 모든 기업과 정부의 활동들이 정보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지침은 기업의 업무 활동을 돕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규제로 연결되는데, 이를 IT컴플라이언스라고 한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대부분의 기업으로 하여금 IT의존적 환경으로의 편입을 가속화 시켰고, 그 결과 각종 정보침해 사고의 발생빈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추가 생산을 위한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자산보호(예: 개인정보)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IT관련 법제도(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감독규정, ISO 27001, HIPPA, GLBA, SOX 등)가 등장하게 되었고, 규제당국의 기업에 대한 IT컴플라이언스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디지털화된 정보가 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다

행스럽게도 이러한 인식이 IT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첫 번째 사항으로 만들었다. 전자적 기록물의 사용을 위한 접근기록을 보관하고 정보보호의 투명성과 고객과의 신뢰성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IT관련 각종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조직관리와 기업 신용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로온 점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기업은 IT관련 법제도 교육을 통해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및 외부 해킹을 차단하여 디지털화된 고객정보보호, 자료보관, 재무보고서 공시 등과 관련하여 IT컴플라이언스를 확고히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세계 각 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 등 많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규제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결국 모든 정보가 IT시스템으로 집중되어 관리되는 디지털시대에 높은 수준의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IT컴플라이언스인 것이다.

2. 컴플라이언스와 정보기술의 융합

기업은 중요문서에 대한 보호조치로 관리자 외 접근을 제한하여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킹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의 준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IT의존적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이 준수해야 할 복잡하고 다양한 IT규제는 관리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정보가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취약성, 대량성, 휘발성, 초국경성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정보보호조치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적으로 개인정보 하나만 놓고 보았을 뿐인데, 규제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비용 부담은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보고 및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으로 데이터 자동화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방법은 없을까?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데이터, 컴퓨터 네트워크,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법 등 정보기술로 규제 준수를 돕는 레그테크(RegTech)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레그테크 서비스는 위험노출을 평가하고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며 자금세탁방지나 사기방지 확인 및 적발을 돕기도 한다. 또한 각종 절차를 용이하게 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통한 분산원장의 장점을 이용하여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과 회계감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IT컴플라이언스와 정보기술의 융합은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컴퓨터가 규제 내용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동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진보된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기업은 복잡한 법규를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비)정형화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3.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위한 규제와 기술의 혁신적 아이콘(IT, AI 감사)

우리나라는 2003년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회계 피감기관의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NAFIS)을 완성했고, 이에 따라 감사자가 컴퓨터를 활용한 감사기법(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 CAATs)을 적용하여 NAFIS뿐만 아니라 타기관의 디지털자료의 교차점검(cross-check)을 가능하게 했다.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업의 일탈행위에 CAATs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기업은 청렴윤리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규제당국과 정보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이른바 디지털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정보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금, 컴플라이언스만으로 부족한 내부통제를 IT, AI 감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반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우리 기업 등 민간이 규제당국과 기업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에 박차를 가할 좋은 기회이다.

첨단기술은 국경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했고, 누구나 초소형의 대용량 저장매체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첨단기술은 불법적인 정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메커니즘 용도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보안사고 0%'라는 완벽보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IT 및 AI감사 시스템으로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의 체제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IT 및 AI 감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정보보호와 청렴윤리경영

1. 로그 관리의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모든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도 접속기록에 관한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로그자료(log data)가 정보시스템상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와 개선, 나아가 보안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비록 로그자료 확보가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업이 정보기기의 접속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IT컴플라이언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로그가 제공하는 이익

- (1)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이 삭제되거나 훼손되는 일 없이 잘 보관되어 있음을 보장한다.
- (2) 정기적인 로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보안사고, 정책위반, 운영결함의 식별이 가능하다.
- (3) 침입자의 불법접속 및 내부 중요정보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넷째, 감사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수행하여 조직 내 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수립

기업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정보자산을 관리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11 가지 통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정한 정보보안 방법론은 적절한 통제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참고하여 매뉴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정보통합 매뉴얼 구성

- (1) 정보기기의 관리자 외 접근통제 강화
 - 접근권한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ex: 교육이수자 또는 전자자격증 소지자 등)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 (2) 권한 없는 자의 접근 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3)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
- (4)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수립
- (5) 데이터 암호화
- (6) 주기적인 로그 분석
 - 접속기록의 정기적인 확인·감독 및 의무 저장기간
 - 의무저장기간 만료 확인 및 자료삭제
- (7) 침해 방지조치로의 소극적 사이버 방어행위
 - 방화벽, 보안패치, 인증시스템, 안티바이러스
- (8) 비정기적으로 비상점검 및 테스트 실시
- (9) 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일원화 및 간소화

디지털시대 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통하여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여 사고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첨단기술과 청렴윤리경영과의 융합을 위한 시발점, 기초 교육과 시스템 개발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 동향

1. 대법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확정

대법원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11억 원의 벌금형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허위과장광고 혐의등에 대해 2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약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관세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최종 11억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 참고: 법률신문. 2022. 01. 1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672>

2.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46%가 여성임원 제로

L 기업분석 연구소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7개 기업의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7개(47%) 기업에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올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상 기업 중 절반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연구소 대표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여성 임원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데다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이 선임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조선일보. 2022. 01. 19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1/19/IZXQTYQINRHTTHBIE2M7LVFJSI/>

해외 동향

1. 2022년도 최대 글로벌 리스크 '사이버 보안'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회사의 성장을 위협할 최대 글로벌 리스크로 '사이버 보안'을 꼽았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대 글로벌 위협 요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CEO 49%가 사이버 리스크라고 답했다. 사이버 리스크는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조직과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 참고: 매일경제. 2022. 01. 1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50503/>

2. WHO "백신 불평등이 일자리 죽이고, 세계 경제 회복 위협"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이 델타,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출현을 야기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불평등이 사람과 일자리를 죽이고, 세계 경제 회복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백신 보급을 늘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준 결의를 전세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세계 전체로 넓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팬데믹(대유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코리아헤럴드. 2022. 01. 0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107000060>

행사소식

Corporate Litigation & Investigations Executive Roundtable

디지털시대에 새로운 법률과 기존 법률 사이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주최 : CONSERO

일시 : 2022년 3월 15일

장소 : The Ritz Carlton, Boston, Boston, MA

참고 : <https://consero.com/events/corporate-litigation-investigations-executive-roundtable-3/>

The Responsible Business USA

비즈니스와 금융의 성공적인 상업적 전환을 위한 전략 회의

주최 : Reuters

일시 : 2022년 4월 19~20일

장소 : New York Marriott at the Brooklyn Bridge, USA

참고:

https://events.reutersevents.com/sustainable-business/responsible-business-usa?utm_campaign=ETH%2014JAN22%20Newsletter%20Database&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

문화 속 기업윤리

편리함 너머의 윤리의식을 살펴라 책, '인공지능 윤리하다'



4차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곳곳에 친숙하게 녹아들었다. 생활의 편리와 효율성을 개선함에 따라 그 적용 범위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술적 이로운 너머에 있는 윤리성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사람에 의해 위임된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이 인간이 겪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기용 군사 로봇의 상용화 등을 놓고 이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의 문제가 잇따를 것이다.

인공지능은 정해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 부분 자율성을 지닌 것처럼 지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개발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불러올 법적 분쟁, 윤리적 이슈는 결국 그것을 만들어 낸 우리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을 반영한다.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가치 편향적이진 않은지, 공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윤리의식과 규범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윤택한 삶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출처: 교보문고)

웹툰 - 바로보는 기업윤리

01. AI 구축·운영을 위한 올바른 윤리준칙의 필요성



AI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곳곳에서 상용화되면서, 그 윤리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도입되는 AI가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AI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지켜야 하는 내부 윤리준칙이 차별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은 지 점검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독자 퀴즈

Q. '각종 법규 및 지침을 통하여 기업 및 정부활동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 ① Reg Tech
- ② AI
- ③ 3Vs
- ④ IT 컴플라이언스

- 지난 호 정답: ④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전루름님, 강래우님, 이명우님, 양찬혁님, 이수정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